

광주·전남 18명 중 13명... '초선의 힘' 지역현안 해결 기대

21대 국회 초선 역할론 주목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18명 중 13명이 초선이며, 전국적으로도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이 초선으로 의회에 진입하면서 21대 국회에 '신인 돌풍'이 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초선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보니, 지역 예산 확보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상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내 '입김'이 부족한 초선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자칫 불이익을 받으면, 이는 고스란히 지역의 피해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정가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당선인 18명 중 생애 처음으로 급배지를 단 당선자는 13명이다. 광주의 경우, 8개 지역구 중 송갑석 의원(서구갑)만 유일하게 재선이며, 윤영덕·이병훈·양향자·조오섭·이형석·이용민·민형배 당선자 등 7명이 초선이다. 전남에서도 10개 지역구 중 초선은 김원아·추철현·김희재·소병철·서동용·윤재갑 당선자 등 6명에 이른다. 광주·전남지역 초선 비율은 72.2%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급배지를 처음 단 초선이 8명(44.4%)인 것과 비교할 때 이 지역의 불감지 폭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의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전국적으로도 초선의 비율이 높다. 민주당 소속 지역구 당선자 163명 중 약 42%인 68명이 첫 급배지를

문화전당 시즌2·군공항 이전 등

관련 상임위 전략적 배치 필요
전국 300명 중 151명이 초선
靑 출신 다수 당내 영향력 촉각

달게 됐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 17명까지 합하면 여당 당선인 가운데 총 85명이 '새내기' 국회의원이 셈이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당선자는 17명으로, 당내 초선 그룹내 가장 큰 규모다. 또한 일부 초선 당선자 중에 청와대 안팎에서 직간접적으로 대통령과 합을 맞춰온 당선자들이 많아 향후 활약상도 기대되고 있다.

윤영덕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비롯해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 고민정 전 대변인 등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들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지역에서는 윤영덕(동남갑) 전 청와대 행정관, 조오섭(북구갑)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민형배(광산을)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이 초선 당선자로서 청와대와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당의 경우 지역구 의원 84명 중 초선은 40명으로 약 48%다. 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 18명까지 합하면 초선 비율은 과반인 57%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구 당선자 가운데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출신이 14명으로 3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이 극심한 '영남 풀림'을 나타내면서 초선 의원들의 분포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지역구 초선의원 40명 중 부산 9명, 대구 5명, 울산 3명, 경북 7명, 경남 4명 등 영남권이 28명으로 70%에 달했다.

민주당 광주시장 한 관계자는 "초선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특정 상임위에 몰리거나 일부 상임위에 아예 이 지역 의원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아시아문화전당 시즌2와 광주군공항이전 등 지역 현안과 직결되는 상임위에 적당하게 지역 의원들을 배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재확인

"세출 조정으로 예산 확보"
중부세 개정안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와의 이견에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해 말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을 담은 중부세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 후 기자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은 선거 기간 약속한 대로 (국민) 100%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며 "재원과 관련해서는 세출을 최대한 조정하면서 국제 발행은 이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 발행은 최소한으로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코로나19로 진행되지 않은 사업비가 많고 이자나 세금도 줄어든 부분이 있어 13개 상임위에서 세출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반대 대해서는 "여야 협상,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100% 지급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들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진행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 원내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빨리 지급해야 하니 시기를 맞추기 위해 금액을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준에 제한 안(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전국민 지급)이 가장 기본이고 나머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30%는 나중에 주는 방안은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정 원내대변인은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경우 의원이 "불합리하다. 70%를 먼저하고 30%를 나중에 하면 무리한 행정력 낭비가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층 지급분에 대한 기부 환수 등과 관련해 정 원내대변인은 "현재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부세법 처리 방안에 대해 "당에서는 원칙적으로 12·16 대책을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기로 했다"며 "야당과 법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선을 다해 이번 4월 국회 때 12·16 대책을 반영한 김경우 발의법을 통과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총선 유세에서 밝힌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 중부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총선 과정에서 당의 인사가 일부 (중부세에 대해) 말했는데 그 내용이 12·16 대책에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공동 TF 내달 구성...광주 군공항 이전 돌파구 마련하나

사업 주도 광주시 → 정부

기부대 양여 방식 변경 등 모색

이전 후보지 선정을 놓고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특별기구(TF)를 꾸린다.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25일 4세대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3개 시도지사 공동 유치 선언 시, 공동 TF를 구성해 군공항 관련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마련할 TF 5월 중 출범시키기로 했다.

양측 기획조정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교통·건설, 공항 이전 추진 관련 부서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는 구성안이 검토 중이다.

광주시는 이달 말에도 출범을 바라지만 도는 방사광 가속기 유치전에 집중된 뒤 5월 중순 이전을 적정 시기로 보고 있다.

출발 시기와 관계없이 공동 TF의 과업은 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으로 좁혀진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수년째 헛바퀴를 돌았던 이유가 이전 후보지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었다는 점에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자체와 주민 일부가 광주시 주도의 이전 사업 추진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주체를 광주시→정부로 바꿀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광주시·전남도·지역정착권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방식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국방부 예산이 투입되는 특별회계 방식이 아닌, 광주시가 새로운 군 공항을 전남에

건설해주고(기부) 국방부 소유의 광주 군공항 부지를 넘겨받아(양여) 개발 이익으로 이전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과연 광주시가 기존 군 공항 부지 개발을 통해 6조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확보해서 군공항을 이전하고, 이전부지 지원 재원까지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 공동 TF가 정책 대안을 만들면,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몰표를 던져준 호남지역 선거 결과를 지렛대 삼아 광주시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로 사업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야 사업 정상 추진이 가능해진다 는 논리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어려워 사업 추진 주체 변경이 어렵다면, 국방부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것이 차선으로 거론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5월 중순 이전에 공동 TF를 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시·도가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면 정부 지원 강화 등 정부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건의(광주시)→이전 타당성 검토(국방부)→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국방부)→이전후보지 선정(이전후보지 선정위)→주민투표/유치신청(이전후보지 단체인)→이전부지 선정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광주는 2014년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고, 2016년 군 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적정성)를 받았지만, 이전 후보지 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을 의식한 국방부는 다음 단계인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미루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흑산공항 Heuksan Airport

바다위의 꽃정원 천사섬 흑산도! 다도해의 하늘길이 열립니다.

2023년, 대한민국 최초의 섬지역 소형공항 흑산공항 개항

이제 1004섬의 표정이 바뀝니다. 흑산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01 도시민(이용객)의 교통기본권과 이동권 보장

어디서든 직항으로 1시간! (무인국제공항 30분)

- 흑산도와 홍도, 거제도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해양관광 명소로서 매년 약 30만명 이상의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 현재의 수도권에서 흑산도까지는 육상과 해상교통을 모두 이용해 약 7시간이상 소요되지만 하늘길(항공기)을 이용하면, 전국공항 어디서든지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합니다.
- 년중 110여일 풍황주의보 등으로 선박을 결항하지만, 공항개항으로 언제든지 육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 특히, 흑산공항 건설로 인해 국토 최서남단 거제도과 만제도 등 11개의 부속도서와 비공/도초도 섬들을 연결해주는 해상교통의 요지로 성장할 것입니다.

02 세계속의 안전한 흑산공항

- 국내 법령과 국제 기준을 모두 준수하며, UN산하 전문기구인 ICAO(이카오)에서 권고하는 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안전 자문을 통해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위험예정 항공기의 시뮬레이터를 제작
- 실제 비행환경과 약 99%이상의 환경을 일치시켜, 시뮬레이션 및 항공학적 검토 시행
- 흑산공항 운항계획인 ATR-42기종(50인승, 터보프롭)은 미국유럽 등 상용화되어 운영 중(96개 항공사 295대)
- 실제비행환경 99%이상 일치

03 실속있는 경제적인 공항

경제성(B/C) 4.38

비용(Cost) 약 1,833억원

편익(Benefit) 약 6,800억원

- 흑산공항은 건설비 대비 4.38의 국민 편익 증가 효과를 입증하는 경제성 분석을 마쳤습니다.
- 흑산공항은 5조원 이상의 대형공항이 아닌 2천억원 이하의 건설비로 경제적인 소형 공항을 건설하겠습니다.

04 국립공원과 함께 친환경 공항건설

동식물, 해양환경 및 산림자원 고려

- 흑산공항은 흑산도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개소가 넘는 후보지에 대한 세부 검토 및 타당성연구를 수행하고,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 특히 철새보호를 위해 먹이공급(조, 수수)과 보금자리(습지, 초지) 조성하여 철새와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 국립공원내 공항시설 선정사례 분석을 통해 동식물의 서식지 확대 및 철새안정화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최고의 친환경 해양생태공원으로 탄생될 것입니다.

흑산 소형공항 건설 예정지

- 흑산공항 건설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할 것이며, 섬은 한계가 아닌 자원이라는 발상에서 탄생했습니다.

소형공항은 섬사람들의 소망이자 희망입니다.